

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

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하세요!

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

적극행정 국민신청 · 소극행정 재신고, 이제 국민의 새로운 권리입니다.



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?

정책개선 및 권익구제 패스트랙 방식

국민이 민원·제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
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
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제도

신청 요건

- 공익성 민원 거부 또는 국민제안 불채택
- 국민신문고(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) 활용·신청

조치 방법

-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자료조사 및 검토
-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
첨부하여 개선 권고

처리 절차 (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)



※ 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2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2

※ 적극행정 지원제도 :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부서의 의견제시

소극행정 재신고란?

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
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

신청 요건

-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 침해
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 발생
-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미해결

조치 방법

-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

처리 절차



※근거 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3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3

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

법령 및 정책 개선

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한강 낚시 금지구역 재조정

- 상황 낚시로 인해 한강공원 이용 시민 불편 증가, 낚시금지구역 5년 내 재조정 불허
- 개선 5년 고시기간 내에도 시민안전 및 불편해소 위해 재조정

규정 적극 해석

보육수당(아동수당 등) 신청기간 탄력적 운영

- 상황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 필요, 60일 초과한 소급지원 신청 거절
- 개선 보육수당(아동수당, 양육수당) 신청기간 연장 등으로 소급지원 대상 확대

신속한 조치 요구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개선

- 상황 버팀목자금 지원 근거로 국세청 자료만 인정, 피해 소상공인 제외 빈번
- 개선 다양한 매출 증빙서류를 인정하는 등 지급요건 완화방안 마련

업무연계 및 기관 협업

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

- 상황 지자체별 제 각각의 아동급식제도 운영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
- 개선 급식단가 인상, 급식 제공 음식점 웹 지도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 강화

생활 속 불편 해결

횡단보도 앞 빗물고임 해결

- 상황 횡단보도 주변 빗물 틈 보행자 피해를 3년간 방치
- 개선 빗물고임 방지공사 등 조속한 개선 권고

소극행정 재신고 사례

적당 편의

임대차계약 사전 안내 강화

- 상황 임대사업 등록 시 신고하였다고 오인, 기간 내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
- 개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점 분석 → 임대사업자에게 사전안내 강화 · 개선

업무 해태

업무처리 지연·방치 행위 방지 대책 마련

- 상황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 2회 연장 후 약 9개월간 안내 없이 지연처리
- 개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업무 지연에 대해 소관기관의 면밀한 재조사를 권고